

2019학년도 수능 대비 매화송 모의고사 2회 해설지

<정답>

1	④	5	③	9	⑤	13	③	17	⑤
2	①	6	②	10	②	14	①	18	①
3	④	7	⑤	11	③	15	③	19	②
4	⑤	8	⑤	12	③	16	④	20	②

<해설>

1. 사회계약설

본 글은 존 로크(John Locke)의 통치론(원제 *Two Treatises of Government*)에서 발췌한 글이다. ④ 로크의 견해에 따르면, 인민은 스스로 결사하여 하나의 단체를 형성할 수 있다. 이는 같은 책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나 정부를 구성하기로 동의할 때, 그들은 즉시 하나의 단체로 결합되어 하나의 정치체를 결성하게 되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 민주주의의 발전

①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최고 의결 기관은 민회이다. 평의회는 민회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민회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였다. ② 군사령관이나 최고 재정 담당관 같이 업무 수행 능력이 중요시되는 일부 직책은 투표로 선출하였다. ⑤ 현대 사회에서는 전자 민주주의, 시민 단체, 이익 단체 등의 다양한 형태로 민주주의가 나타난다.

3. 민주 선거의 원칙

(가)는 보통선거의 원칙, (나)는 평등선거의 원칙이다. ①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의 선거권 확대에만 치중되었다. 보통선거는 20세기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③ 국회의원 선거에서 1인 1표제에서 1인 2표제로의 변화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④ 지방선거에서 특별시민, 광역시민, 일반 도민은 1인 7표를 행사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1인 5표, 세종특별자치시는 1인 4표

를 행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총투표수의 차이는 평등선거의 원칙과 관계없다.

4. 기본권

① ⑦은 평등권과 관련이 깊으며,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의 전제 조건이 된다. ② 자유권은 소극적, 천부적, 방어적, 포괄적 성격의 권리이다. ③ 자유권을 포함한 모든 기본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 ④ 자유권은 참정권보다 일찍 성립되었다. ⑤ 정당은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과 함께 비공식적 정책 결정 참여자에 해당한다.

5. 정부 형태

ㄱ. 행정부 수반에 대한 탄핵 소추는 대통령제에서만 가능하다. ㄴ. 모든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서 입법부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다. ㄷ. 의원집정부에서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할 수 없으며, 내각에 대한 불신임만 가능하다. ㄹ. 모든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서 입법부 의원의 임기는 법으로서 정해져 있다.

6. 선거 결과 분석

1안은 선호투표제를, 2안은 석패율제를 적용했다. 각 안에 따른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거 제도	정당별 의석수(석)			
	A당	B당	C당	D당
현행	3(1)	2(1)	0(1)	0
1안	3(1)	1(1)	1(1)	0
2안	3(2)	2(2)	0	0

* ()안의 숫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나타냄.

ㄱ. 각 정당별 전국 득표율 비는 약 4:3:2:1이다. 현행제도의 의석비는 4:3:1:0이며, 2안의 의석비는 5:4:0:0이다. ㄴ. 제시된 모든 선거 제도에서 A당은 과대대표 되었다. ㄷ. 2안에서 전체 의석수는 9석이다. ㄹ. A당은 1안을 적용했을 때, 현행제도와 의석수가 같고, 2안을 적용했을 때는 현행제도보다 의석

수가 많다. 따라서, A당은 선거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

7. 헌법 기관

A는 대통령, B는 국회, C는 감사원, D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① 사면권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다. ② 국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며, 회기는 100일이다. ③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며,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된다. ④ 감사원장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8.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헌가'는 위헌법률심판, '헌나'는 탄핵심판, '헌다'는 정당해산심판, '헌마' 및 '헌바'는 헌법소원심판이다. 권한쟁의심판은 사건번호 '헌라'이다. ① 법원, 국회, 정부 모두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은 탄핵 소추 및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정당해산심판으로 해산된 정당의 소속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헌재 2014.12.19. 2013헌다1] ④ 헌법소원 심판이 기각된다는 것은 심판대상조문이 위헌하지 않다는 것이다. ⑤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및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와 판례의 변경을 제외한 경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재판관 5인이 찬성하면 반드시 인용된다.

9. 미성년자 계약

② 제한 능력자는 최고(催告)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며, 법정 대리인이 최고의 상대방이 된다. ③ 갑이 병에게 선물을 준 행위도 일종의 계약행위이므로 갑의 부모가 갑의 동

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 ④ 무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상대를 기망하였다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계약 당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10. 죄형법정주의

A는 죄형법정주의, B는 명확성의 원칙, C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D는 소급해석금지의 원칙이다. ① 범죄와 형벌은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② 명확성의 판단 기준 및 정도는 일반인이 기준이다. ③ '자수'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정하는 것은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서 갖는 개념 외에 '범행발각 전'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공직선거법의 '자수'의 범위를 그 문언보다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처벌 범위를 확대한 것이 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1997.3.20. 96도1167 판결] ④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는 허용된다.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⑤ 위헌 그 자체로서 유죄판결이 무효가 되지 않고 재심 사유가 된다.

11. 형사 절차

① 구속적부심 결정은 항소의 대상이 아니다. ②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미결 구금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형사보상 청구의 대상은 법원이다. 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선고유예이다.

12. 범죄 성립 요건

(가)는 오상방위, (나)는 기대가능성이다. ② 오상방위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한 착오가 아닌,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이다.

③ 오인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다면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기대가능성은 책임조각사유이다. ⑤ 행위자의 관점이 아닌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7.15. 선고 2004도2965 판결]

13. 사회법

ㄱ. 사회법은 사용자나 독점 기업 등 사회·경제적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ㄴ. 경제법에 한정된 설명이다.

14. 상속

ㄱ. D가 먼저 사망했다면, E가 D를 갈음하여 갑의 재산을 상속한다. 이 경우, E와 C가 각각 500억 원씩을 상속받는다. ㄴ. C가 일반 입양되었다더라도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만, 본래의 친족관계 상에서의 상속권이 사라진다. ㄷ.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이 경우, B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다. ㄹ. 갑이 사망한 후, D가 사망했으므로, D가 갑의 재산을 상속받고, E가 D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따라서, C와 E가 각각 500억 원씩을 상속받는다.

15. 부동산

ㄱ. 임차권은 채권의 성격을 띤다. ㄴ.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우선변제권 또한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 받은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ㄷ.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ㄹ.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

16. 민사 절차와 불법행위

ㄱ. 소(訴)는 피고의 주소가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ㄴ. 지방법원 단독부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본원 합의부에서 상급심이 진행된다. ㄷ. 간판은 공작물로서 소유자인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점유자의 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 ㄹ.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그로 인해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였다면,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17. 근로계약

② 주휴수당에 대한 설명이다. 1주간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다. ③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④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통화의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 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적어도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18. 국제법

A는 조약, B는 법의 일반 원칙, C는 국제관습법이다. ① 국제법은 이를 강제적 집행 절차 및 기구가 없다. ② 대통령이 조약 체결 및 비준권을 갖는다. 국회는 비준 동의권을 갖는다. ③ 조약에 대한 설명이다. ④ 금반언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으로 법의 일반 원칙에 해당한다. ⑤ 법의 일반 원칙, 국제관습법 모두 국가 간의 명시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

19. 국제연합

② 비상임이사국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으나 중임은 가능하다. ③ 상임이사국은 이사회의 안건에 대한 비토(Veto)권을 갖는다. ⑤ 일정한 요건 하에 비가맹국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20. 국제 사회의 변천

ㄴ. 국제연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창설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결성된 것은

국제연맹이다. 르. 데탕트는 프랑스어로 휴식, 완화를 뜻하며, 1970년대 냉전 체제가 완화된 것을 일컫는다. 닉슨 독트린 직전이 아닌, 이후이다.